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Summary in Korean

2009 년도 연금 전체상: OECD 국 은퇴 후 수입 제도

국어 개요

경제위기와 연금 정책

보고서는 깜짝 놀랍게 하는 주요 수치를 선보인다. 실제 금융위기 때문에 2008 년 OECD 국 민간연금 자금의 투자가치는 23%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무려 5 조 4 천억 USD 수준에 맞먹는 액수이다. 또한 2009 년에는 OECD 국의 경제적 산출이 4.3% 감소하고 2011 년 전까지는 경제성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실업률은 2007 년도의 5.6%에서 2010 년도의 9.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이 경제 및 사회 위기로 전환되었다.

사적연금제도 계획은 형평성 악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의 가장 시급하고 명백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연금이 노후 소득에 있어 중대한 비중을 이미 차지하는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같은 국가는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나 어떤 연금제도도 현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순 없는 듯하다. 고실업률과 저소득의 결과로 기부수입이 줄어들고 동시에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공적연금제도 또한 재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연금보험과 다른 노후자산 투자에서 상당한 퇴직금 손실을 보았다. 이는 노령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데 특히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이 취직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하기 전 퇴직저축 가치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연금을 포함한 저축에 의한 소득은 OECD 국 퇴직자 소득의 평균 1/4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중 7 개 국가에서는 40% 웃도는 수준을 보인다.

이 모든 손실은 퇴직자의 빈곤을 재기할 것인가? 대다수의 OECD 국가는 연금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손실 타격을 완충하는 “자동조정장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 자산 조사(Means-test)에 근거하여 결정된 연금수당은 위험영역(critical thresholds)으로 연금이 하락한 퇴직자들을 위해 공급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저축에 의한 퇴직소득이 감소할 때 얼마간 일부 국가는 노령층을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즉각적인 위안 조치 제공을 위해 정부가 받는 단기적 정치 압력은 매우 높다. 현재 명백한 위험성 중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대다수의 고령실업자를 장기적 질병 및 장애 수당으로 이동시키거나 조기퇴직 제도를 재시도하는 데에 끌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가 보여주듯이 단기적으로 계획된 조치는 계속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자금과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사회고령화 시기에 퇴직 적합연령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위기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제도 개혁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미래의 빈곤퇴치를 위해 효율적인 보호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재검토는 주요 우선과제 중에 속한다. 아울러 여러 국가가 이미 도입한 자동 연금 조절장치를 (연금을 평균수명 및 재정계획에 연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침체 기간에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흔히 연금 급여, 일부 경우는 명목상 연금 급여가 삭감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즉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경제회복이 시작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퇴직자를 제외하면서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민간연금에 대한 신뢰는 지금까지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다양한 연금제도에서 벗어나 공공에만 오직 의지하는 부과방식(pay-as-you-go) 제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슬로바키아 경우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의 사용자가 예전 공적연금제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격론 끝에 얻은 개혁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틀린 길로 가는 것이다. 한편 금융 경제 위기는 현재 해결해야 할 인구적 주요 과제 수행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였다. 이 문제는 지속하고 있으며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반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금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금융위기는 사적연금 설계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더 나은 규정, 효율적인 행정, 여러 옵션에 따른 리스크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 그리고 퇴직 시일이 다가올수록 자동으로 위험성이 낮은 투자로 전환하는 장치 등을 포함한다. 정책입안자가 공적 및 사적, 부과방식(pay-as-you-go) 및 적립방식, 개인 및 공동 등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여러 연금-소득 제도를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면 노령화 사회의 번영 지속을 위해 투자된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2009 년도 OECD 연금 전체상: 지침

금융위기와 그 결과로 얻은 심한 경제 위기는 일 년 동안 뉴스내용을 독차지하였다. 2009 년 판 연금 전체상 제 1 부 첫 번째 특장은 금융위기가 연금-소득 제도에 가져오는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본 특장은 어떤 집단 (특히 연령층), 어떤 연금제도 시스템, 그리고 어떤 국가가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지를 훑어본다.

또한 금융위기 타격을 제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논의되고 평가되었다. 특히 본 특장은 대다수 국가가 도입한 경기부양 종합정책에 의해 연금제도가 주로 두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늘어난 고령층 급여 지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 완화를 위한 공적연금 준비금 사용이다. 노동시장, 공공 사회안전망, 사적연금자금과 투자선택 규정을 포함한 연금정책에 대한 다른 미래 해결방책 또한 본 특장에서 평가되었다.

제 1 부 두 번째 특장은 고령층의 소득과 빈곤을 살펴본다.

2000년대 중반 OECD 국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순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8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가계크기 차이 참작). 그러나 국가간 큰 격차를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층 빈곤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노령 인구가 빈곤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의 노령인구 평균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0.6% 수준과 비교하여 13.2%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본 특장은 연금 개혁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소득 및 빈곤의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본고 제 1부의 세 번째 특장은 최근의 연금개혁 주제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 본 특장은 작년도 연금 전체상 분석을 업데이트하면서 2004년부터 OECD 국가가 연금개혁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5개 국가만이 의미 없는 변화를 보였거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의 개혁은 연금제도의 주요 목표: 근로자 사회보장적용, 퇴직 수당 적절성, 재정적 안정, 경제 효율성 (노동공급과 저축 장려금 왜곡현상 최소화), 행정 효율성과 여러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수입 보장 위주로 설정되었다.

2004년-2008년 기간은 연금개혁의 완전한 변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전개 기간으로 평가된다. 2004년 전까지 10년 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개혁은 없었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같은 일부 국가의 연금개혁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개혁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역전되기까지 하였다. 이탈리아 경우 연금 개혁에 따른 법률 개정이 연기되었고 슬로바키아는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예전 공적연금체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 개혁의 유사한 여타 후퇴현상 또한 본고 다른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겪는 위기는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에 근거하는 장기적 전략에 향후 부적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연금 전체상 전 보고서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내용 범위를 확장시킨 제 1부의 마지막 특장은 사적연금 적용내역을 살펴보고 특히 공적연금의 낮은 적용 때문에 각 개인이 노후 자급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는 계속 당면하는 염려 사항으로 특히 현 위기가 사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더욱 우려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제한 실정은 사적연금이 노후자금의 주요 부분으로 계속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 자동가입 및 세금감면 혜택을 포함하여 노후 저축을 보장하는 여러 정책도 본 장에서

평가되었다.

보고서 제 2 부는 다양한 연금 지표를 소개하며 처음의 9 개 지표는 OECD 연금모형에 따라 산정된 개인 연금수급권을 제시하며 산정된 매개 변수의 값은 2006 년도 상황을 나타낸다. 산정 방법은 2006 년도에 노동시장에 들어왔으며 전 근로 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 체계하에서 일한 근로자의 미래 연금수급권을 나타내기 위해 구축되었다. OECD 30 개국 중산층 근로자 총 소득대체율 -연금 수당과 근로 중 수입 비교-은 평균 59% 수준에 미치고 이는 영국의 31%, 아일랜드와 일본의 34%에서 그리스의 96%까지의 국가 간 격차를 보인다. 2009 년 판은 자발적 사적연금 시스템을 참작한 소득대체율의 새로운 산출표를 추가하였다.

여러 국가가 노령인구의 소득세에서 양보 안을 제시하고 있고 대다수 연금수령자가 사회보장분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순 대체율(세금과 분담 참작)은 70% 평균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 대체율은 성별과 소득층에 따라 산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지출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직 퇴직 시의 대체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금 전망이다. 이는 연금 수급 연령, 평균수명,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지불 조정*의 차이 등을 고려한 연금 수급 값을 제시하는 연금 부부의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대략, 룩셈부르크의 남성은 평생 825 천 USD, 여성은 1 억 USD 상당의 연금을 수령받게 된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며 평균 OECD 국의 남성은 400 천 USD, 여성은 475 천 USD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전체상 2009 년 판에 새로이 보인 그다음의 4 개 지표 그룹은 퇴직-소득 제도를 구성하는 더욱 광범위한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기여금 종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 기여율의 변천을 소개한다. 사실상 연금 기여율은 연금 시스템이 받는 인구학적 압력에 의해 뚜렷한 안정성을 보이며 1994 년도의 평균 20%에서 2007 년도의 21%의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공적연금 지출을 살펴볼 때 인구학적인 압력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0 년 2005 년 사이 GDP 의 6.2%에서 7.2% 수준을 보이며 국민소득보다 17% 더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연금 지출 지표는 의무 사적연금과 가계수당 및 보조금과 같은 현물 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퇴직-소득 시스템에 관련된 두 개의 지표는 자발적 사적연금 적용범위와 연금자금 자산 가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적연금에 관해 다룬다. OECD 국가의 약 1/3 이 사적연금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중 7 개국에서 45% 이상의 노동인구가 자발적 사적연금 수급자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타격을 받기 전

연금자금은 OECD 총 국민 소득의 75% 수준에 상당하였다.

4 개의 마지막 지표 그룹은 연금제도의 실행 원인과 배경을 검토한다. 이 중 3 개는 인구학적 지표로서 평균수명, 출생률 그리고 부양비(근로연령층 1 인당 연금 수급자 수)를 가리킨다. 이 지표들은 각 속도는 다르지만 OECD 국 전체의 노령화 현상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 3 위 자리에서 2050 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가장 ‘늙은 국가’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다른 국가는 이미 노령화된 국가로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리 빠른 속도로 노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많은 여타 지표에 기초가 되는 평균 소득 데이터 자료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9 년 연금 전체상의 제 3 부는 국가연금제도의 주요 지표를 소개하고 일관성 있는 변수와 규칙을 제시하며 개인연금 수급권 (소득대체율과 연금 부(wealth))의 주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제 3 부 처음 부분에서는 OECD 30 개국의 주요 변수 및 규칙을 간단히 요약한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